

‘통합 반대’ 국민의당 평화 개혁연대, 광주전남 토론회

천정배 · 박지원 · 박주선 · 정동영 · 김동철 등 참석



국민의당 내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모임인 평화 개혁연대가 13일 두번째 토론회를 연다. 평화개혁연대는 행사 당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

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를 주제로 향후 국민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천정배, 박지원, 박주선, 정동영, 김동철, 조배숙, 장병안, 이상돈, 최경환, 박주현, 김경진 의원(이상 선 수) 등이 참석한다.

다.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기조 발제를 한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응징 ▲민주정부 수립과 국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 단행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의 채택 등 촛불혁명의 세 단계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선 나상기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고문, 최혁 남도일보 주필, 박주현 의원,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일 전남도의회 원내대표 등이 토론을 벌인다. 평화개혁연대 측은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포함해 촛불혁명 이후 평화개혁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광주, 전남의 의견을 폭넓게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주 전북 지역에서 세 번째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강조...“국민 주권 실현”

“남은 임시국회 기간 민생법안 처리 여야 속도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입법, 권력기관 개혁,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일은 국회 소명이자 책무”라며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에 여야가 속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치개혁특위에서 오랜기

간 화두였던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특히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는 국가가 민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유일한 길이며 동시에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발전, 정치 개혁을 뒷받침할 선거 제도 마련 위해 정치권 모두가 편협한 기득권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을 시작으로 총 4차례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신진화법을 끌어 들여서 국회 공진을 장기화시킬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선출되는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일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길 기대한다”며 “새 지도부와 함께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5.18특별법이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수하는 홍준표-이재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위기의 남북 관계 발전적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재우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김동철 “文정부, 과거 답습...캠코더 인사, 신적폐의 시작”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 우려...국민 기대 무너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 상황에 대해 “과거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캠코더(캠코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폐정상을 위친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것이 대통령 스스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실패는 곧 정권 실패를 부르고 정권실패는 국민실패로 가는 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그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

거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에 대해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결과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지난 4월 대선후 때에는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과 낙하산 방지 정책협약까지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여야 4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선 무자격자, 부적격자의 낙하산이나 보은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러나 국민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은 착한 낙하산인가.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제협력단이사장 등에 대해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려니 앞

로도 한국마사회장, 국립중앙의료원장,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이 예외없이 캠코더 인사로 채워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적폐 우려와 함께 공공기관 안팎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마사회장의 전문성을 비판하는 소리가 내부에서 커지고 폴리텍대학 전국교수총회의는 이사장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두르는 의료계 반발이 터졌다”고 고발했다. 그는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면 적폐고 문 대통령이 하면 정상인가. 적폐는 만들지 않으면 청산할 일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전면 철회하고 전문성과 능력 검증된 인사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 또 국민의당이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한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조원진 발언 논란 “문재인씨...잘해야 대통령이라 부르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11일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있다. 조 의원은 전날 중앙 선거방송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씨는 제대로 하고 있다”며 “1년 전 촛불 거는 운동은 음모로 조작되고 기획된 권력 찬탈 권력 쿠데타”라고 맹

비난했다. 조 의원은 논란이 일자 “대통령으로 잘해야 대통령으로 부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1년 전 대한민국을 생각해보다”며 “그때 제시했던 그 많은 거짓들 하나도 맞는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국은 한반도가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말을 안 듣고 핵개발을 하고 있다. 중국

의 속내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구속이 연장되냐. 이것이야말로 정치보복”이라며 “화합하는 정부가 되려면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말했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